

# 한반도에서 국가들의 규모와 그 성공: 최적 규모에 한정해서

이 병 희\*

- I. 머리말
- II. 국가의 규모와 그 성공
- III. 병합 한반도와 분할 한반도:  
규모와 성공
- IV. 마무리

## 국문요약

이 글은 소국인 한국과 북한이 통일된 대국 즉 병합 한  
반도가 경제적 차원에서 더 큰 편익 달리 말하면 성공을  
낼 것인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알레시나-스포르오  
레 모델에 따르면, 자유무역 질서에서 소국이 대국보다 그  
시민에게 더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경제통합  
과 정치통합 붕괴는 함께 간다는 것이다. 대국은 이질성과  
문화적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시민의 요구와 정책을  
끌고루 충족시키기 어려워 갈등과 분쟁, 분할에 직면할 수  
있다. 소국의 이익은 동질성에 있다. 소국은 그 시민의 선  
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어, 사  
회 안정과 응집력을 유지하면서, 높은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모델은 크레디트 스위스의 33년 동안의 소국  
의 성공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이 있지만, 알레시나-스포르오  
레 모델과 크레디트 스위스의 실증적 연구에 의거하면, 대  
국인 병합 한반도에서 편익이 그 비용보다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은 설득력이 약한 듯하다. 오히려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클 듯하다. 크게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치적  
국경은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선 안 된다. 남북한 병합 사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적인 요인들은 사실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애매  
하고 불확실하다. 병합 한반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앞서  
야 한다. 통일신중론도 자리 잡아야 한다.

국가의 규모와 그 성공이라는 단일 요인에서 보면, 동  
질적 소국-한반도에서 2국 체계 혹은 n국 체계이 더 바람  
직할 수 있다. 국가의 규모와 그 성공을 합리적 근거로 삼  
는다면, 동질적인 소국가들이라는 틀 안에서 경제통합(정  
치통합 붕괴)과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다. '작은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주제어:** 국가 규모, 한반도 통일, 이질성, 규모의 편익과  
비용, 소국의 성공, 알레시나-스포르오레 모델

\* 공주대학교 교수

“자유무역과 경제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시장 규모와 국가 규모는 상관관계가 없다.  
모든 나라의 시장 규모는 세계가 된다.”<sup>1</sup>

## I. 머리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함으로써, 한반도에는 두 행위자인 한국과 북한이 등장하였다. 양쪽은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으며, 어떤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든 통일을 희망한 듯하다. 그렇지만 1991년 한국과 북한은 국가의 자격으로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하였으며, 사실상 국가행위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연구는 한반도에서 한국과 북한의 통일이 현 상태-한국과 북한의 2국 체제 혹은 n국 체제-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sup>2</sup>

이 글에서는 통일이란 용어 대신에 병합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병합이란 둘 이상의 나라가 하나로 합침을 뜻한다. 이 글에서 병합이란 A국 영토의 전부 혹은 일부가 B국의 완전한 주권 아래 들거나 A와 B가 새로운 영토 공동체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병합 한반도는 단일 주권하의 국가행위자이다. 한국과 북한이 병합된 한반도가, 경제적 차원에서 더 큰 편익 즉 성공을 낳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제적 차원-성공-은, 고려할 중요한 요소이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화는 한반도 분할과 병합에 있어 복잡성(complexity)을 제거하고 혁신과 혜택을 마련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들의 병합은 드물었으며, 소국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보기를 들면 국제연합 회원국은 1945년 51개국에서 2017년 현재 193개국으로 늘어났다. 거의 네 배나 커진 셈이다. 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화와 소련의 붕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소국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 GDP도 5배 정도 늘어났다. 국가 규모의 경제적 결과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말부터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사로 자리 잡았는데, 특히 1990년 후반부터 알레시나(Alesina), 스

<sup>1</sup> A. Alesina and E. Spolaore, *The Size of Nations*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3), p. 218.

<sup>2</sup> 김규륜 외, 『한반도 통일의 효과』 (서울: 통일연구원, 2014); 조한범·김규륜·김석진·김형기·양문수 지음,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3); 권영경, “기존 통일 비용 담론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시각,” 『평화학 연구』, 제1권 4호 (2010), pp. 149~170 참고.

<sup>3</sup> Mette Hjort and Duncan Petrie, *The Cinema of Small Nation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7), p. 4.

포라오레(Sparaore), 왜지아르(Wacziarg)와 같은 경제학자들이 국가 규모의 결정 요인들을 실증적·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같은 연구에서,<sup>4</sup> 국가 규모와 경제적·정치적 변영과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분석이 큰 흐름을 이루었다.

한국인 다수는 한국과 북한의 분할을 참을 수 없는 민족적 파국으로 보고 통일 대국을 지상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알레시나와 스포라오레의 경제 분석과 실증적 연구의 도움으로 소국인 한국(북한)의 편익과 비용, 대국인 병합 한반도의 편익과 비용 양쪽을 비교해서 득실(得失)을 따지면, 한반도 분단 사태 즉 2국 체계 또는 n국 체계를 뒤집어 볼 수 있을 듯하다. 어쩌면 민족주의는 새로운 국가의 어린 시절 질병일 수 있다.<sup>5</sup>

한반도 통일문제 연구에서 국가 규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한반도 분단 말하자면 정치적 국경의 설정을 외생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 듯하다. 대체로 정치적·경제적·언어적·문화적·교육적 제도 등에 집중하였다. 국가 규모의 중요성을 못 보고 넘어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반도 분단 이전의 국경이 자연적이며 불변이라는 오해에서 연유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알레시나와 스포라오레는 정치적 국경 설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가 규모 역시 제도이므로 변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새로운 정치·경제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은 국가 규모를 다른 제도와 같은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의 최적 규모는 국가 규모의 편익

<sup>4</sup> A. Alesina and E. Spolaore, "On the number and size of natio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2 (1997), pp. 1027~1056; Alberto Alesina & Enrico Spolaore, Roman Wacziarg, "Trade, Growth and the Size of Countries," in *Handbook of Economics, Growth*, volume 1B, eds. Philippe Aghion and Steven N. Durlauf (Amsterdam: Elsevier 2005), pp. 1499~1542; A. Alesina, E. Spolaore and Wacziarg, "Economic integration and political disintegr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0, no. 5 (2000), pp. 1276~1296; R. Bolton and G. Roland, "The breakup of nations: A political economy analysi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40 (1997), pp. 1057~1089; Leopold Kohr, *The Breakdown of Nations* (Cambridge: Greenbooks, 2011); D. Friedman, "A Theory of the Size and Shape of N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5, no.1 (1997), pp. 59~77; Sanjeev Goyal and Klaas Staal,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8 (2004), pp. 563~593; A. Casella and J. Feinstein, "Public goods in trade: on the formation of markets and jurisdiction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43, no. 2 (2002), pp. 437~462; Shang Gin Wei, *To divide or to unite: A theory of secessions* (Mimeo: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91); Marvin Suesse, "Accounting for the Size of Nations: Empirical Determinants of Secessions and the Soviet Breakup," EHES Working Papers in Economic History, no. 67 (2014) 등을 들 수 있다.

<sup>5</sup> Vladimir Kolossov, and John O'Lighlin, "New Borders for a new world orders: Territorialities at the fin-de-siecle," *Geojournal*, vol. 44 (1998), pp. 259~273.

과 비용 즉 이질성의 비용과 편익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가 규모가 오히려 국가의 경제적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는 단순 이론 모델로 제시될 수 있으며, 실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실증적 지침이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국가의 최적 규모의 추구는 한반도 통일정책을 설정 혹은 수정하는 데 실용적·독창적·과학적·이론적 효용 가치를 어느 정도 지닐 수 있다. 통일이상론에 헤어날 수 없게 파문혀, 통일정책에서 이성적·합리적 요소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할 위험을 줄이는 데 이 논문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글은 통일반대론이 아니라 통일신증론이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병합 한반도의 규모와 성공을 해명할 단서를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

## II. 국가의 규모와 그 성공

### 1. 국가 규모: 정의

사회과학자들은 국가 규모(the size of a state)를 다르게 정의한다. 어떤 이는 국가 규모를 소국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와 대국 개방경제(large open economy)로 나누기도 한다. 물론 전자는 세계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나라의 경제를 뜻한다. 다른 이는 단일 지표를 적용하게 국가 규모를 정의하기도 한다. 가령 국가의 면적 혹은 거주지의 면적에 따른 분류도 있다. 거주지 면적에 따르면 덴마크가 우크라이나보다 더 크다.<sup>6</sup> GNP<sup>7</sup>나 GDP 등으로도 국가 규모를 나눈다. 자원 대국과 자원 소국으로 나누기도 한다. 여러 지표를 통합하여 사용할 경우에, 각각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지표들은 대국과 소국으로 분류하는 데에 여전히 주관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sup>8</sup>

따라서 다수의 연구자는 국가 규모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인구(population)라고 본다. 소국과 대국의 경계선을 1,000만 명 혹은 1,500만 명으로 보기도 하며, 2,000만 명으로 설정하기도 하며, 100만 명으로 정하기도 하며, 소국을 다시 미니국가, 마이크로 국가, 도시국가 등으로 세분하기도 한다.<sup>9</sup> 그래도 인구는 국가 규모를 설정하는 데

<sup>6</sup> E. Gellner, *Thought and Chang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96), p. 135.

<sup>7</sup> Chan Yul Yoo,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Korea as a Small State," MD disser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1990.

<sup>8</sup> Joerg Koenig and Renate Ohr, "Small but Beautiful? Economic Impact of the Size of Nations in the European Union," CEGE Discussion Papers, no. 128 (2011).

<sup>9</sup> *Ibid.*; Robert Read, "Growth, Economic Development and Structural Transition in Small Vulnerable States," WIDER Discussion Paper no. 2001/59 (United Nation

가장 적절한 기준이다. 하지만 소국에 대한 확실한 지표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sup>10</sup> 인구는 국가 규모를 분석하는 데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쉽게 얻을 수 있는 지표이며, 국내 시장 규모와 노동력을 대변한다. 가중치의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계분석의 해석에서도 단순·유익하기 때문이다. 이 글도 국가 규모를 인구로 정의한다. 한국과 북한을 다룰 경우에만, 상대적이지만 하지만 인구란 단일지표에 근거해서 한반도에서 한국과 북한이라는 2국 혹은 n국을 소국(smaller nations)으로 병합 한반도를 대국(larger nation)으로 간주한다. 한반도에서 소국들의 성공 그리고 하나의 대국의 실패에 대한 해명을 다루고 싶기 때문이다.<sup>11</sup>

## 2. 국가 규모와 경제적 편익과 비용: 알레시나-스포라오레 모델

알레시나와 스포라오레는 국가들의 균형수(均衡數, equilibrium number), 민주화, 경제통합의 관계를 연구해서 얻은 결과로 민주화는 국가들의 분할을 낳으며 권위주의적 세계가 아니라 민주적인 세계에서는 소국들이 더 많이 등장한다고 지적한다. 뒤 이은 국가의 최적 규모에 대한 연구에서 두 사람은 대국의 편익과 비용 모델을 다루고 있다.<sup>12</sup>

### 가. 규모의 편익

규모의 편익을 보면, 첫째, 많은 공공재를 생산함에 있어 일인당 비용이 대국에 서는 낮아진다. 국방, 화폐금융 체계, 커뮤니케이션, 경찰, 범죄 예방을 위한 하부 구조, 도로, 보건, 대사관, 국립공원 등이다. 공공재는 비경쟁적·비배타적이므로, 이용자의 수와는 무관할 수 있다. 소국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대국보다 더 큰 비

University, August 2001), pp. 1~2; P. J. Lloyd, and R. M. Sundrum, "Characteristics of small economies," in *Problems and Policies in Small Countries*, ed. B. Jalan (Beckenham: Croom Helm, 1982), pp. 17~38.

<sup>10</sup> Mette Hjort and Duncan Petrie, *The Cinema of Small Nations*, p. 4.

<sup>11</sup> Paul Sutton, "The concept of small stat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e Commonwealth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00, no. 413 (2011), pp. 141~153.

<sup>12</sup> A. Alesina and E. Spolaore, "On the number and size of nations," pp. 1027~1056; A. Casella and J. Feinstein, "Public goods in trade: on the formation of markets and jurisdictions," pp. 473~462; R. Bolton and G. Roland, "The breakup of nations: A political economy analysis," pp. 1057~1089; 효과적인 국가 규모를 검증할 수 있는 수식(數式)으로는 Alesina, Spolare, and Wacziarg, "Trade, Growth and the Size of Countries," p. 1511 참조

용을 지불해야 한다.<sup>13</sup>

둘째, 대국은 외국의 침략과 위협을 덜 받는다. 국가 규모에 더불어 늘어나는 공공재가 바로 안보(安保)이다. 그래서 방위비 지출에서 일정한 규모의 경제를 가정하면, 소국이 대국보다 비례적으로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 국가 규모와 국방비 지출의 몫은 군사동맹을 맺음으로써 영향을 받지만, 국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안보에 유리하다. 그리고 소국이 대국과 동맹을 맺을지라도, 대국은 소국한테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런저런 형태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군사동맹을 맺어도, 소국이 불리하다.<sup>14</sup>

셋째, 대국은 강력한 외부성(externality)을 포함하는 공공재 제공에 집중할 수 있다.<sup>15</sup> 가령 소국 A가 불황 혹은 자연재해에 처했을 때 B로부터 직접적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대국(A+B) C일 경우에, A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공동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sup>16</sup>

넷째, 대국은 빈곤 지역과 부유 지역을 아우르는 재분배 구조를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다.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각 지역이 이루기 어렵지만, 개별지역을 통합한 대국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 넓은 지역에 걸쳐 양호한 재분배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평균적 부를 지닌 지역들 보다 빈곤한 지역들이, 부유 지역을 포함하는 대국 형성을 원하는 이유이다. 반면에 부유 지역은 독립을 더 좋아한다.<sup>17</sup>

마지막으로, 시장 규모이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분업이 시장 규모(extent)에 제한된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sup>18</sup> 시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역, 전문화, 규모의 경제에서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sup>19</sup> 가령 잡지 100부를 생산하는데 3,000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1,000부를 생산하는데 4,000 달러밖에 지출하지 않는다고 한다.<sup>20</sup> 지식 확산, 인적 자본의 축적에서 긍정적 외부효과, 기술 혹은 지식 창조에 내장된 규모에서 수익 증가 등이다. 보통 대기업이 소기업보다 생산성

<sup>13</sup> A. Alesina and E. Spolaore, "On the number and size of nations," p. 1503.

<sup>14</sup> *Ibid.*, p. 1503.

<sup>15</sup> Thomas Hebling, "What are externalities?," *Finance & Development*, (December 2010), pp. 48~49.

<sup>16</sup> A. Alesina and E. Spolaore, "On the number and size of nations," p. 1053.

<sup>17</sup> *Ibid.*, p. 1503.

<sup>18</sup> *Ibid.*, p. 1504.

<sup>19</sup> James Gwartney, "Presidential Address: Institutions, Economic Freedom, and Cross-Country Differences in Performance,"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75 (2008), pp. 937~956.

<sup>20</sup> *The Economist*, October 20, 2008.

이 높다고 한다.<sup>21</sup>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 규모이다.

요약하면, 첫째,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일인당 비용이 낮아지며 둘째, 일인당 국방비와 군비 지출이 줄어들고 셋째, 국내 소득 재분배 능력이 커지며, 넷째 외부성의 혜택을 넓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되며, 결국 시장이 커지고 전문화와 분업에 따른 생산성이 향상된다.

## 나. 규모의 비용

거꾸로 규모의 비용을 지적하면, 첫째, 행정·혼잡 비용은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규모가 위에서 지적한 편익을 제공한다면, 국가 규모는 커져야만 하며, 제국이 가장 적합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국가 규모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국가가 크면 클수록 행정 비용이 규모의 편익을 압도할 수 있다.<sup>22</sup> 크다고 더 좋은 것이(large is better) 아닐 수 있다.<sup>23</sup>

둘째, 개인들의 선호(選好)들의 이질성이다. 국가의 실행 가능한 규모를 제한하는 건 개인들의 선호 이질성이다. P국(S국 + N국)을 이루는 데 참여한다는 건, S국과 N국에 속했던 모든 시민 혹은 다수 시민의 선호를 충족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공공선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를 대부분 충족시킨다면 P국의 형성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S국과 N국의 시민들의 선호가 다르다면, P국 내에서 이질적인 시민들의 선호가 지속된다면, P국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국가 규모가 크다면, 선택한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이 모든 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이는 민주적 정치참여를 약화시킬 수 있다. 분할화를 가속화하기도 한다.<sup>24</sup>

이질성 즉 문화적 다양성이다. 알레시나는 규모의 비용에서 적잖은 건 인구의 이질성이라고 한다.<sup>25</sup> 문화적 이질성인데, 이는 더 큰 국가에 불이익을 감수하게 한다. 비록 문화적 다양성의 긍정성을 주장할지라도, 더 큰 국가일수록 문화적 다양성은 커지며, 공공재-국방정책, 재분배 정책, 사회복지, 교육, 화폐 금융정책, 정치체제(민주주의), 지방분권...-를 제공·분배하는 데 상이한 문화적 세력들 사이의

<sup>21</sup> Svend Rasmussen, "Economies of Scale and Size," in *Production Economics* (New York: Springer, 2013), pp. 111~120.

<sup>22</sup> A. Alesina, E. Spolaore, and R. Wacziarg, "Trade, Growth and the Size of Countries," p. 1505.

<sup>23</sup> 탁월한 견해로는 Kohr, *the Breakdown of Nations* 을 참조.

<sup>24</sup> A. Alesina and E. Spolaore, "On the number and size of nations," pp. 1505~1506.

<sup>25</sup> *Ibid.*

정치적 타협은 어려워지고 내적 갈등의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국은 소국보다 다양한 선호·문화·언어들을 지니며, 이로 인하여 더 큰 정치적·경제적 비용이 들어간다.<sup>26</sup>

셋째,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라 규모의 비용이 늘어난다. 자유무역을 도입하는 국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역 개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규모의 편익은 이질성의 비용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자유무역이 확산되면 될수록 국가의 최적 규모도 줄어든다. 비교적 작고 동질적인 국가가 자유무역의 세계에서 번창한다. 보호무역의 경우에, 이질적 개인들은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더 큰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자유무역 질서에서는 국가 규모가 시장 규모와 일치할 수 없다. 국경의 재설정 은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장 규모와 국가 규모가 일치하는 곳은 폐쇄경제 체계뿐이다.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 불안하게 공존하는 무역질서에서, 특히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대국이 소국보다 경제적 성공에 더 중요할 수 있다.<sup>27</sup>

무역개방과 자유무역의 확산, 국제 수송비용의 현저한 하락, 인터넷의 확산 등은 국가분할을 촉진한다. 알레시나와 스포라오레에 의하면 국가들의 평균 규모가 줄어들면 들수록 편익이 늘어난다.<sup>28</sup> 복지국가도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소국들에서 더 쉽게 기능할 수 있다. 소국 시민은 세금으로 다른 배경을 지닌 시민을 도와야 할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다. 규모의 장점과 단점

한편으로 대국은,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자국민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국내 시장에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세금을 통하여 쉽게 필요한 것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국은 이질성과 문화적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시민들의 욕구와 정책을 끌고루 충족시키기 어려워 갈등과 분쟁, 분할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분할화(fractionalization)와 관계가 깊다. 알레시나는 소련의 붕괴 원인으로 다양한 집단들의 이질성을 지적한다.<sup>29</sup>

<sup>26</sup> A. Alesina and Drazen, "Why stabilization delay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1 (1991), pp. 1170~1188; Alberto Alesina, Arnaud Devleeschauer, William Easterly, Sergio Kurlat and Romain Wacziarg, "Fractionalization," Harvar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no. 1959 (2002), pp. 1~64.

<sup>27</sup> A. Alesina, E. Spolare, and R. Wacziarg, "Trade, Growth and the Size of Countries," pp. 1504~1505.

<sup>28</sup> A. Alesina and E. Spolaore, *The Size of Nations*, p. 539.

소국의 이익은 동질성에 있다. 소국은 그 시민의 선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어, 사회 안정과 응집력을 유지하면서 높은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다. 자유무역을 번창하고 갈등이 적다면, 소국이 성공할 가능성이 대국보다 높다.<sup>30</sup>

소국일지라도 고립을 고수하고 국경을 닫고 자족을 추구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 자유무역 지향적이면서 기술을 지닌 소국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대국이라도 미국은 살아남았는데, 그 이유는 강력한 주 정부들을 지닌 분권화된 정치질서를 도입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스포라오레는 대국인 중국이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문호를 개방하고 자유무역질서 안에서 많은 나라와 접촉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련처럼 붕괴되거나 아니면 고도의 중앙집중적이며 비민주적 체제를 유지할 거라고 그가 암시하는 듯하다.<sup>31</sup>

알레시나-스포라오레 모델의 핵심은 이렇다. 첫째 ‘소국은 국제무역에 개방적인 한 번창할 수 있다. 역으로 소국은 개방적 세계무역 제도를 유지하는 데 특별히 호의적이어야만 한다.’<sup>32</sup> 자유무역과 경제통합의 세계에서 소국은 경제적으로 번창하며, 세계경제 통합이 증가하면, 대국의 편익은 줄어들고 정치통합 붕괴(disintegration)의 비용은 줄어든다.

둘째 ‘만약 대외적 위협에 직면한다면, 응집력이 강한 단위를 지녀야하고 커야 한다(If you have an external threat, you want to have a more cohesive unit and be large)’ 라고 스포라오레는 가리킨다. 대국은 무역장벽과 보호무역의 세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국이 늘어나면서 자유무역의 세계에서, 경제통합과 정치통합 붕괴는 함께 간다.’<sup>33</sup> 상호배타적인 건 아니다. 경제적 규모와 국경에 의해 설정된 일국의 정치적 규모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sup>34</sup>

비교적 작은 동질적인 인구의 국가가 번영하고 자유무역질서에서 편익을 누린다. 다른 한편 대국은 중앙집중적 재분배제도를 통하여 편익을 지닐 수 있지만, 다

<sup>29</sup> Marjorie Howard, “Is there a perfect size for a country? Economist says yes,” *Tufts Journal* (February, 2005).

<sup>30</sup> *Ibid.*

<sup>31</sup> *Ibid.*

<sup>32</sup> A. Alesina, “The Size of Countries: Does it matter?,”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vol. 1, no. 2~3 (2003), p. 309.

<sup>33</sup> A. Alesina, E. Spolaore and R. Wacziarg, “Economic Integration and Political Disintegration,” pp. 1276~1296.

<sup>34</sup> Michelle R. Garfinkel and Stergios Skaperdas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Peace and Confli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 778.

양성과 이질성이 늘어나서 이런 편익은 상쇄된다. 대국의 시민들 사이에 이익 갈등의 가능성도 높아진다.<sup>35</sup> 규모의 비용으로 인하여 소국들로의 분화를 촉진한다. 국가 규모가 커질수록, 국내 집단들의 사회정치적 선호들도 이질화된다.<sup>36</sup> 분파적 갈등·폭력이 심화될 수 있다.

### 3. 국가의 규모와 그 성공: 국가 비교 분석

알레시나와 스포라오레는 통계적·역사적 분석을 통하여 자유무역의 세계에서 소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대국보다 높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소국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가 아니면 대국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가란 의문에서 중심은 규모(size)와 성공(success)의 관계이다. 성공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이다. 성공은 경제적 관점에서 GDP(GNI) 성장, 일인당 GDP(GNI), 인간개발지수(HDI) 등의 기준을 적용해서 분석할 수 있다.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CS)는 1980년부터 2012년에 걸친 33년 동안의 자료 분석으로 58개국을 표본 뽑기 하여 국가 규모가 성공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였다.<sup>37</sup> 이 조사는 대국을 인구 2500만 이상의 나라로, 중국을 인구 1천만에서 2500만 사이의 나라, 소국은 1000만 이하의 나라로 분류한다. 소국을 다시 1945년 이전에 있었던 소 구국(old small nations)과 1945년 이후 독립한 소 신국(new small nations)으로 나누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알레시나 스포라오레 모델의 타당성을 CS의 연구에 바탕 하여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규모와 공공지출이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규모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소국의 군비지출은 GDP의 2%로 대국의 군비지출 2.1%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교육비 지출은 소국이 아니라 대국이 낮았다. 소국의 교육비 지출은 GDP의 5%가 넘었으나, 대국은 5%에 미치지 못했다. 보건의료비 지출은 소국이 많았는데, 소국은 GDP의 약 7.1%, 대국은 GDP의 약 6.4%를 썼다. 이것만을 놓고 보면, 공공재 서비스 제공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대국과 소국에 적용할 수 있다. 공공부문 피고

<sup>35</sup> Alberto Alesina, Roberto Perotti, Roberto & Enrico Spolaore, "The Political Economy of Fiscal Discipline, Together or Separately? Issues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political and fiscal union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9 (1995), pp. 751~758.

<sup>36</sup> A. Alesina and E. Spolare, *The Size of Nations*, p. 21.

<sup>37</sup>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The Success of Small Countries* (Zuerich: CS AG, 2014).

용자의 봉급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소국은 거의 8%였지만, 대국은 약 5%였다. 그러나 간접세를 빼고 보면, 법인세는 소국보다 대국이 7% 높았다. 개인소득세는 대국이 무려 5%나 높았다. 당연히 일인당 세 부담이 대국에서 더 낮아야하는데 결과는 반대였다. 법인세는 소국이 GDP의 3.2%를 대국이 GDP의 2.6%를 차지하였는데, 대국의 대기업은 유치국의 자회사를 이용하여 모국에서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한계 세금을 내는 대기업은 대국에서 드물다.<sup>38</sup>

둘째, 국가효율성과 규모이다. 밀러와 웨이먼-존스는 1980~1989년 동안 85개 개도국의 국가 효율성이 국가 규모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였다.<sup>39</sup> 이들은 국가 규모와 효율성 사이의 어떤 단순한 상관관계도 없다고 입증한다. 효율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인적 자본, 개방적 사고, 규제 제도는 규모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 특히 국가 발전과 효율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교육, 보건, 기술 등이며, 개방적 무역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규모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CS도 소국이 대국보다 이런 중요한 요소에서 보통 우수하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sup>40</sup>

셋째, 경제적 불평등이다. 재분배 구조를 보면, 상위 10% 인구가 지닌 부는 소국이 가장 낮았고 대국이 가장 높았다. 성인 일인당 평균 부에서는 소국이 대국을 앞질렀다. 일인당 명목 GDP도 대국보다는 소국이 높았다. HDI에 있어 상위 20개국 가운데 소국이 55%를 점하였으며, 대국은 약 30%였다. 대체로 소국이 상대적으로 HDI가 높았다. 분리 독립운동의 김새가 있는 카탈루냐(Catalonia), 플랑드르(Flanders), 왈로니아(Wallonia), 퀘벡(Quebec), 스코틀랜드에 있어 HDI를 비교할 수 있다. 퀘벡은 13위로 11위의 캐나다보다 낮았지만, 카탈루냐와 스코틀랜드는 각각 스페인과 영국(UK)보다 높았다. 재분배 구조에서도 소국이 대국을 앞서고 있다.<sup>41</sup>

넷째, 인구의 이질성과 다양성이다. CS도 국가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이질성을 다루고 있다. 알레시나 스포라오레 수식에 의거해서 분할화(分割化) 지수를 적용한 결과, 규모와 분할화는 정비례한다. 소국의 분할화 지표가 가장 낮았는데, 언어, 인종과 종교 등 문화적 다양성의 정도에서 그러하였다. HDI가 높을수록 분할

<sup>38</sup> *Ibid.*, pp. 20~23.

<sup>39</sup> Milner and Thomas Weyman-Jones, "Relative national efficiency and country size: evidence for developing countries,"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7 no. 1 (2003), pp. 1~14.

<sup>40</sup>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The Success of Small Countries*, pp. 6~11.

<sup>41</sup> *Ibid.*, pp. 6~10.

화의 정도가 낮았다는 말이다. 특히 소 구국(old small nations)이 더욱더 그러하였다. 인구의 이질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호의 이질성도 커진다. 따라서 몇몇 서비스 가령 교육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이질성 지표가 가장 높은 나라 10개국 가운데 5개국이 대국이며, 가장 낮은 나라 10개국 가운데 소국은 8개국이었다.<sup>42</sup>

다섯째, 개방성에 대해서도 CS는 무역의 개방성과 일인당 GDP와 크게 상관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무역의 개방성은 국가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개방성이 높은 소국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sup>43</sup>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카니(AT Kearney)의 세계화 지표에 근거하면, 상위 20개국 가운데 소국이 80%를 점하였다. 대기업 혹은 다국적 기업은 대국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국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꼭 주는 건 아니다. 다국적 기업은 생산과 마케팅, 본부가 같은 나라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소국이든 대국이든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참여한다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국에 불리한 건 아니라는 뜻이다. '성공적인 소국은 이런 수단으로 세계화 추세에서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즉 아주 비용이 많이 들거나 유치 대국(larger host country)이 이용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 전문화에 투자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sup>44</sup> 이런 성공적인 소국이 바로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이다. 싱가포르는 1960년에서 1990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신 소국이 늘어나고 무역의 자유화와 세계화의 추세를 30여 년 간의 자료 분석에 기초하면, 국가 규모와 그 성공 사이에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높다.<sup>45</sup>

통일로 대국이 된 독일과 소국들로 분할된 체코슬로바키아가 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평화적으로 분할되었으며, 양측은 독립국가의 길을 걸었다. 1990년 서독과 동독이 통합되었다. 이걸 패배로 보든 승리로 보든 관계없이 말이다.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규모와 통일 독일의 규모가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면 흥미롭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실질 GDP 성장을 보면, 대국이 된 독일과 소국이 된 체코와 슬로바키아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슬로바키아와 체코 사이 무역은 계속 줄어들었지만, 슬로바키아의 일인당 GDP는 2014년 체코 수준에 도달하였다.

<sup>42</sup> *Ibid.*, p. 25.

<sup>43</sup>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는 *Ibid.*, p. 11 참고.

<sup>44</sup> *Ibid.*, p. 35.

<sup>45</sup> *Ibid.*, p. 4 참고.

1995년 슬로바키아의 일인당 GDP는 체코수준의 약 69%에 지나지 않았다.<sup>46</sup>

독일의 재통일은 양상이 다르다. 동독은 독일 전체 인구의 약 20%, 독일 전체 GDP의 15% 쯤을 점하였으며 통일 이후 동독지역과 서독지역 사이의 일인당 GDP는 계속 좁혀지고 있다. 독일은 성공적인 통합으로 한국과 같은 분단국에 모범적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재통일 과정은 엄청난 비용을 요구한다. 동독에 대한 지출은 줄어들고 있으나 반대로 1991년부터 도입된 통일세(Soli)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통일세 수입은 약 170억 유로로 통일 이후 가장 높았다. 2017년 현재 독일 사람의 89%가 통일세 폐지를 원하고 있다.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이 동등한 입장에 경쟁하는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니다. 통일 이후 지금까지 3,430억 유로를 동독 지역을 위해 사용하였지만, 동독 지역의 6개 연방국(east federal states)의 경제 생산량은 서독 지역의 72%이며, 드레스덴과 라이프치히 같은 번창하는 도시를 빼고는 실업률은 높으며 임금은 낮고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계속되고 있다. 2017년 선거에서 소정부 기업친화적인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은 통일세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하였다.<sup>47</sup> 독일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도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 사이에 장벽이 없어졌지만, 마음의 장벽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풍자한다.<sup>48</sup>

세 국가의 비교에서 국가 규모와 성공(실패)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 III. 병합 한반도와 분할 한반도: 규모와 성공

이 장에서는 ‘상대적’일지라도 한국과 북한, 병합 한반도 3행위자만을 고려한다. 물론 그 기준은 인구이다. 인구 기준에서는 약간 벗어날지라도, 한국과 북한은 CS의 인구기준 분류에서 유추하면 신 소국(new small nations)이다.<sup>49</sup> 소국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령 한국은 그리스에 비하면 대국이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에 비하면 소국이다. 상대적 구별이 중요할 수도 있다.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sup>46</sup> *Ibid.*, pp. 26~27; Michael Kraus & Allison Stanger, eds. & tran., *Irreconcilable Differences? Explaining Czechoslovakia's Dissolution* (Oxford: Rowman & Little Field, 2000), pp. 259~268 참고.

<sup>47</sup> Chase Jefferson, “Taxpayers demand end to ‘Soli’ tax to boost eastern German economy,” September 11, 2017. <<http://p.dw.com/p/2nM7x>> (검색일: 2017.11.25.)

<sup>48</sup> Wolfgang Mattes et al., *Politik erleben* (Paderborn: Verlag Schoeningh, 1995), p. 213.

<sup>49</sup> Chan Yul Yoo,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Korea as a Small State* 참고.

클러스터에 속하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몽고를 비교하면, 한국과 북한은 소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50</sup> 이웃나라, 경쟁국, 적대국과 대립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소국과 대국을 정의할 수 있다. 어떤 이는 소국을 더 큰 규모의 나라의 보호 혹은 더 큰 힘을 지닌 이웃의 보호 아래 사는 나라로 규정하기도 한다. 소국 혹은 대국에 대한 절대적·불변적 정의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2017년 현재 세계 인구에서 보면, 한국이 세계 27위이며 북한이 52위일지라도 말이다. 인구의 상대성에 바탕 해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과 북한을 소국(smaller countries)으로 병합 한반도를 대국(bigger country)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 1. 한국과 북한: 소국의 성공과 실패

스포라오레(Spolaore) 교수는 갈등은 중요한 변수라고 말하면서, 일국에서 서로 싸우는 다수의 상이한 집단들 혹은 다수의 상이한 측면들에서 연유하는 비용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질성을 떠올리게 하며, 한반도에서 전쟁·분단·갈등 비용의 중요한 원천이다. 한반도 분할은 적대적 이혼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탈냉전의 시대에 들어와 북한은 여전히 폐쇄경제를 유지하면서, 세계무역 질서와도 동떨어져 있다. 번영이 아니라 리바이어던(독재자)의 생존을 위해서만 제한적인 외부 접촉을 하고 있다. 스포라오레는 소국이 문호를 개방하면 그 경제가 급속히 성장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참여를 거부할 때에는 나쁜 경제적 성과를 나올 것이라고 한다. 작은 규모와 작은 개방성(small size and small openness)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상태에 머물 수 있다. 규모가 작고 최소한의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북한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는 다르게 자유무역 질서에 참여였으며, 무역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였다. 이런 개방성은 한국이 성공을 거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 경제는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HDI에서나 경제 규모에서나 세계 10위권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일인당 명목 GDP는 2만 9,115 달러로 2017년 기준 세계 31위이다. 일인당 명목 GDP 2만 달러 대의 국가들로는 쿠웨이트, 브루나이, 스페인, 몰타, 바레인, 바하마, 대만, 키프로스,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베니아 등이 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스페인을 빼고 한국에 비하면, 소국이다.<sup>51</sup>

<sup>50</sup> 여기에 대해서는 Matthias Maass, "The elusive definition of the small state," *International Politics*, vol. 46, no. 1 (2008), pp. 65~83 참고.

## 2. 병합 한반도: 규모와 성공?

분할된 이후 다시 병합될 한반도에 대해서도 찬반이 맞설 수 있다. 규모의 편익과 비용 말하자면 성공(실패)에 대한 논쟁이다. 병합 한반도는 커진 규모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마련이다. 거꾸로 국가 규모가 커지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병합 한반도이든 아니든 국가 규모에 따라 장점과 어려움이 동시에 나타난다.

### 가. 규모의 편익

내생적 성장모델에서 보아, 존스는 경제 규모가 장기적 성장률 혹은 장기적 일인당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sup>52</sup> 가령 인구의 규모가 커지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전문가의 수가 늘어나서 결국 일인당 소득을 높이는 결과는 낳는다.<sup>53</sup> 큰 인구와 시장이 상품의 시장 경제력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sup>54</sup>

첫째, 병합 한반도에서, 국방, 통화제도, 방송, 도로, 보건, 해외 외교 망과 대사관, 정부 등을 공공재로 보고 비경쟁성과 비배타성을 전제로 하면, 일인당 이런 공공재의 제공 비용이 줄어 들 수 있다. 임현진과 정영철은<sup>55</sup> 방위비에서는 국방비 지출의 감소, 국방인력의 축소를 지적하고 있으며, 외교비에서는 공관의 중복 유지 비용 축소, 외교적 경쟁 비용 축소를 비롯하여 정부 행정부 부분의 고정비용 감소를 들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현재 따로 공공재를 자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단순화해서 인구로 보면 C/7,400만 명이 C/5,000만 명 혹은 C/2,400만 명보다 작다는 것이다. C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비용이다. 물론 C가 규모에 비례하여 늘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라는 단서를 달 수 있다.

둘째, 한반도에 평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인구 약 7,600만의 대국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으로부터의 침략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안보란 공공재를

<sup>51</sup>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7* (Washington: IMF, 2017) 참고.

<sup>52</sup> Charles J. Jones, "Growth: With or Without Scale Effec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9 no. 2 (May, 1999),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One Hundred Eleven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p. 143.

<sup>53</sup> *Ibid.*, p. 139.

<sup>54</sup> Philippe Aghion and Peter W. Howitt, *Endogenous Growth Theory* (Cambridge: MIT Press, 1998); Laincz, A. Christopher and Pietro F. Peretto, "Scale Effects in endogenous growth theory: an error of aggregation not specification," *J Econo Growth*, vol. 11 (2006), pp. 263~288.

<sup>55</sup> 임현진·정영철, "전환의 계곡을 넘어: 통일편익, 통일비용 그리고 통일혜택," 『역사비평』 97호 (2011), pp. 318~348.

한국과 북한이 따로 제공할 경우보다, 병합 한반도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다. 미국 국무부의 『2016 세계군비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구매력 평가기준 국내총생산액의 22.3%를 한국은 2.6%를 군비에 지출한다. 병합 한반도의 군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sup>56</sup>

셋째, 병합 한반도에서는 넓은 재분배 구조를 세울 수 있다. 물론 한국과 북한 지역 주민 사이에 소득 분배를 조정하고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순수한 경제적 입장에서만 보면, 평균보다 낮은 소득을 지닌 북한 지역은 병합 한반도가 아마도 형성되기를 원할 수 있지만, 높은 소득을 지닌 한국 지역은 아마도 병합을 싫어할 수도 있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틀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병합 한반도에서는 시장 규모가 넓어지고, 따라서 전문화에 의해서 상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병합 한반도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시장 규모 약 5,000만 명 혹은 약 2,500만 명의 소비자를 지닌 시장에서 약 7,600만 명의 소비자를 지닌 시장으로 2배 또는 1/2배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규모로 인하여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비용 우위를 떠올릴 수 있다. 국내용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sup>57</sup>

병합 한반도에서 규모의 편익으로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일인당 비용이 낮아지고 국방비와 군비지출이 줄어들며, 소득의 재분배 효율성을 높이고 각 지역의 안전이란 공공재를 더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에 따라 분업과 전문화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병합 한반도는 다양한 편익을 누리고 성공을 거둘 수 있다.<sup>58</sup>

하지만 이견 위에서 검토한 CS와 알레시나-스포라오레 모델에 따른 소국화의 추세에서 보면 설득력을 잃는다. 비용이 편익을 앞지른다는 뜻이다.

## 나. 규모의 비용

첫째, 공공재의 제공에 따르는 비용이다. 한 보기를 들면 행정 비용이 규모의 편익보다 커질 수 있다. 북한 지역의 산세(山勢)는 한국 지역보다 험하며 인구밀도도

<sup>56</sup> US Department of State,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2016*, <<https://www.state.gov/t/avc/rls/rpt/wmeat/2016/index.htm>> (검색일:2017.12.07.)

<sup>57</sup> 『통일신문』, 2017.07.24.

<sup>58</sup> 종합적 견해 및 남북한의 경제적 실태, 통일비용, 통일한국의 국가성격 등에 대해서는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통일개발과, 2016)와 김규륜 외, 『한반도 통일의 효과』 참고.

한국 지역보다 북한 지역이 낮다. 인구밀도가 높은 벨기에의 행정 비용은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의 것보다 적다. 일인당 사회서비스의 제공 비용이 인구 밀도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sup>59</sup> 2012년 기준 북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4곳에 불과하다. 한국은 약 22곳이다. 한국의 6대 도시의 인구를 합하면 북한의 인구와 비슷하다. CS의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일국의 규모는 일인당 공공 서비스 비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일국의 규모에 국가의 지리적 규모를 더하면, 공공재 제공 비용은 인구밀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sup>60</sup>

둘째, 한국 지역 주민과 북한 지역 주민이 지니고 있는 선호의 이질성이다. 병합 한반도는 북한 지역 주민과 한국 지역 주민의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정치경제 체제와 동맹 체계 하에서 60년이 넘게 서로 다른 블록에 속하여 서로 단절된 사회에 살고 있는 양쪽 주민의 선호는 다를 수 있다. 공공재를 한국 지역과 북한 지역 주민 모두에게 제공할 흡족한 정책을 만들기 어려워진다. 현재 한국에서의 남남 갈등, 지역감정에 의한 분열, 불균형 발전 등에 북한 지역의 언어적·이데올로기적·문화적·친외세력·심리적·역사적 요소가 더해진다면 선호들의 차이와 문화적 이질성은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이질성은 정치제도의 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sup>61</sup> 병합 한반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데 비용은 막대할 수 있다. 병합 한반도가 실현되더라도, 정치적 국경의 재설정-재분할-에 유익한 토양이 될 수 있다. 그 보기를 예멘과 이탈리아 통일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변경지대는 휴전선에 의해 철저히 차단되어있지만, 병합 한반도의 변경지대는 1,607km에 달하며, 중국·러시아에서의 다양한 차원의 침투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설상 가상으로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한국·북한 지역 시민이 병합 한반도에서 새로운 정체성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정체성을 서로 강화하려고 할 수 있다.<sup>62</sup> 알레시나에 의

<sup>59</sup> E. Robinson ed.,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Size of Nation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960), pp. 223~240.

<sup>60</sup>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The Success of Small Countries*, p. 20; 병합 한반도에서 군비 증가에 대한 시사점은 A. Alesina and E. Spolaore, "Conflict, Defense Spending, and the Number of Nation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50 no. 1 (2006), pp. 91~120 참고.

<sup>61</sup> Robert Trappil ed., *Programming for Peace: Computer-Aided Methods for International Conflict* (Dordrecht: Springer, 2006), p. 57.

<sup>62</sup> Srilata Zaheer, Margaret Schomaker and Mehmet E. Genç, "Separate Yet Equal: Organization Identity and Culture in International Merger of Equals," Working Paper Series, no. 241 (University of Minnesota, Strategic Management Research Center, 2003).

하면, 리바이어던(독재자)은 지역적 혹은 문화적 이익 표출을 억압하며, 규모의 혜택을 본다고 한다. 쿠즈네츠도 소국이 대국보다 사회적으로 동질적이라고 강조한다.<sup>63</sup> 동질성의 정도와 국가 응집력은 정비례한다는 것이다. 확대하면 분할된 한국이 병합 한반도보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동질성이 강할 수 있다. 분열의 가능성은 병합 한반도에서 더 높을 듯하다.

셋째, 개인들 사이에 소득과 수입의 차이는 오히려 분열을 촉진한다. 병합 한반도에서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 사이의 소득 격차는 재정·재분배 정책을 둘러싼 이해 갈등을 낳을 수 있다. 병합 한반도에서 이질성이 점점 강해지고 각 지역의 정치적 다수가 지닌 이런 정책의 본질에 대한 선호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그리고 분열이 정치적 효율성 상실을 낳을 지라도, 지역 다수에게 정치적 혜택을 준다면, 재분할은 피하기 쉽지 않다.<sup>64</sup> 빈부 격차는 다시 더 많은 작고 동질적 국가들로 분할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자유무역 질서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거미줄처럼 세계 경제에 뒤얽혀 있으며, 심하게 의존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2016년 현재 91.5%이다. 북한과의 병합이 병합 한반도에 규모의 경제와 생산성의 향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유무역의 세계에서 국경의 재설정 은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시장은 사실 세계 시장이다. 병합 한반도에서 경제적 자유화는 이질성으로 인하여 불안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sup>65</sup> 병합 한반도보다 경제적 의미에서 초국적 국가가 더 나올 수 있다.<sup>66</sup>

이질적 분자들로 구성된 병합 한반도에서는 자유무역이 내적 갈등과 분열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유무역과 경제 체제에 대한 북한 지역 주민과 한국 지역 주민 사이에 일치된 견해를 끌어내기 어렵다. 병합 한반도는 국내시장에서 병합 한반도 인구의 사회적·경제적 필요를 우선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하므로, 세계경제에 강하게 통합되기 어렵다.<sup>67</sup> 북한은 자유무역 질서하고는 거리가 먼 정부 아래 있었으므로 그러

<sup>63</sup> S. Kuznets, "Economic growth of small nations," in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size of nations*, ed. Robinson EAG (New York: Macmillan, 1960), pp. 14~31.

<sup>64</sup> R. Bolton and G. Roland, "The breakup of nations: a political economy analysi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40 (1997), pp. 1057~1089.

<sup>65</sup> Robert Trapp ed., *Programming for Peace: Computer-Aided Methods for International Conflict*, p. 57.

<sup>66</sup> M. Pnić, "The end of the nation state?"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vol. 8 (1997), pp. 29~44.

할 것 같다. 이질성으로 인하여 병합 한반도의 규모는 경제적 위축을 낳을 수 있다. 병합 한반도에서 무임승차 지역이 한국의 경우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올슨이<sup>68</sup> 말하는 작은 집단(북한)에 의한 큰 집단(한국)의 이기적 이용(exploitation of the great by the small)의 경향도 커질 수 있다.<sup>69</sup> 한국이 북한을 정치적으로 병합하지 않고도 편익을 볼 수 있는 여지는 많다.<sup>70</sup>

국가 규모가 작아지면, 공공재는 더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그 까닭은 한국 시민이 자신의 세금으로 다른 배경을 지닌 북한 사람을 도울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국가와 소득 재분배에도 한국-소국-이 병합 한반도-대국-보다 유리하다는 뜻이다. 병합 한반도는 자유무역과 소득의 재분배에도 불리할 듯하다.<sup>71</sup> 병합 한반도에서 한국 지역에서 북한 지역으로의 소득 이전이라는 재분배 체계는 경제적·정치적 불확실성을 낳을 수 있다.<sup>72</sup> 병합 한반도에서 안보 비용의 축소와 군비 감축도 받아들이기에는 까다롭다.

#### 다. 병합 한반도: 규모와 성공

병합 한반도가 약 7,600만 인구에게 가져다 줄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면, 한반도 병합 혹은 분할의 당위성을 추론할 수 있다. 한국과 북한이 병합하면 평화가 이룩될 수 있다는 견해는 순진한 낙관론인 듯하다. 영국의 지리학자 맥킨더는<sup>73</sup> 이런 맥락에서 교두보 국가인 병합 한반도의 지정학적 필연성을 1904년 이렇게 예측하였다.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해상세력인 일본과 미국에 관한 것이다. 오히려 병합

<sup>67</sup> A. Alesina and E. Spolaore, "On the number and size of nations," pp. 1276~1296.

<sup>68</sup> Mancu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Harvard: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참고.

<sup>69</sup> Robin Boadway and Masayoshi Hayashi, "Country Size and the voluntary provision of international public good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5 (1999), pp. 619~638.

<sup>70</sup> R. Bolton and G. Roland "The breakup of nations: A political economy analysis," pp. 1057~1089.

<sup>71</sup> Joe Jharakan and Jacques-François Thisse, "The Importance of being small, or When countries are area and not point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 32 (2002), pp. 381~408.

<sup>72</sup> A. Alesina and E. Spolaore, "Together or separately? Issues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political and fiscal unions," *Europe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1995), p. 754.

<sup>73</sup> H. Mackinder,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23, no. 4 (1904), p. 436.

한반도가 더 큰 안보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 ‘...한반도(Corea)는...외측 해군이 중심축 맹방들로 하여금 육군을 배치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고 이 중심축 맹방들이 전체 힘을 해군에 쏟지 못하게 하는...교두보가 될 것이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 동북아 질서에서 보면, 중심축 맹방들이란 중국과 러시아를, 외측 해군은 일본과 미국을 지칭한다. 한국(소국)이, 일본(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터질 경우에 휘말려들 가능성은 병합 한반도(대국)보다는 낮을 것 같다.<sup>74</sup>

병합 한반도가 규모의 경제에 따른 혜택을 줄 거라는 것에 회의를 품을 수 있다. 이미 한국은 북한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투자하고 공장을 세우고 상품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에 팔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국경의 설정은 서서히 그 의미를 잃고 있다. 자족의 경제·폐쇄경제·중상주의를 추구하는 민족국가의 수가 많아진다면 병합 한반도는 병합에 의한 경제적 편익을 크게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보호무역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은 적다. 오마에가<sup>75</sup> 칭한 국경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의 가능성이 더 높다. 한반도에서 정치적 국경은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면 점점 덜 중요해질 것이다. 더 많은 소국들이 등장할 것이며, 소국들에 유리한 국제경제 환경 때문이다. 탈영토화·국제무역 질서와 지역 통합에서, 아담 스미스가 강조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한국은 237km 정치적 국경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sup>76</sup>

스포라오레의 《경제통합, 국제 갈등과 정치적 병합》에서<sup>77</sup> 시사점을 얻는다면, 남북한 사이의 갈등은 정치적으로 분리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제통합 가능성을 흐리게 한다. 그래도 하나는 다자적 균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단위들 한국과 북한, 혹은 n국-이 소국을 유지하며 더 개방적이라면 갈등에 개입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균형이다. 다른 하나는 대 단위에 의해 형성된 병합 한반도일 수 있으나, 높은 이질성과 불완전 경제통합, 더 많은 갈등을 낳을 수 있다. 국가 규모와 경제성장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일정 수준을 넘어선 국가 규모는 자원분배에 비효율성을 낳고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sup>78</sup>

<sup>74</sup> A. Alesina and E. Spolaore, “War, Peace and the Size of Countr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9, no. 7 (2005), pp. 1333~1354 참고.

<sup>75</sup> Kenichi Ohmae, *The Borderless World: Power and Strategy in the Interlinked Economy* (New York: HarperBusiness, 1990), p. 172.

<sup>76</sup> Michael Wohlgemuth, *The Boundaries of the State* (Freiburg: Walter Eucken Institut, 2011).

<sup>77</sup> E. Spolaore, “Economic Integration, International Conflict and Political Unions,” *Rivista di Politica Economica*, (Settembre-Ottobre, 2004), pp. 1~50.

병합 한반도에서 이질성의 차원은 높을 수 있다.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60년 이상 축적되어온 차이와 역사적 편견은 병합 한반도에서 분열(cleavage)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정치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인간관, 사회주의 문화와 자본주의 문화, 경제적 격차,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동맹국-미국과 중국, 또는 러시아와 일본-의 차이, 서로 다른 역사 해석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병합 한반도의 응집력과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sup>79</sup> 오페(Offe)는 이런 이질성에서 연유한 분열을 세 형태로 나누고 있다. 이익 기반 차이, 이데올로기 기반 차이, 정체성 기반 차이이다.<sup>80</sup>

첫째, 해결 가능성의 수준에서 보면, 순수한 이익 기반 갈등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자원에 대한 통제와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차이인데 각 지역 대표가 공평하게 인정하고 부담한 절차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병합 한반도에서 한 지역의 다른 지역에 대한 일방적 지원과 분배는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한국 지역과 북한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감안하면 그러할 수 있다. 물론 그 장기적 결과가 한국 지역과 북한 지역에 모두에 긍정적이라면 이런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말이다.

둘째, 이데올로기 기반 갈등이다. 이걸 해결하기 더 어렵다. 병합 한반도에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세력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세력 사이의 갈등은 종종 선악의 갈등, 혹은 빛과 어둠의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으며, 병합 한반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이걸 병합 한반도 성원의 권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데올로기 기반 차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표에 의해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정체성 기반 갈등이다. 이것은 인정(recognition)의 정치와 관계가 깊다. 북한 체제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과 그 대변자 그리고 한국 체제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과 그 대변자가 공동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다른 정체성 안에 고립되거나 원래 정체성을 상실하고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서로의 정체성을 존중하지 못하면, 즉 인정의 정치가 도입되지 않으면, 일방이 타방의 정체성으로 동화되거나 혹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다면, 일방과 타방이 지닌 정체성이 서로 충돌한다면, 병

<sup>78</sup>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The Success of Small Countries*, p. 25.

<sup>79</sup> *Ibid.*, p. 7.

<sup>80</sup> Claus Offe, "Homogeneity and Constitutional Democracy: Coping with Identity Conflicts through Group Rights,"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vol. 6, no. 2 (1998), pp. 113~141.

합 한반도의 성공은 어려워질 수 있다. 정체성의 갈등은 가장 해결하기 어렵다.

〈표 1〉 이질성 지표가 가장 낮은 10개국

국가	규모 (S= 소국 L= 대국)	분할화 지수 (fractionalization index)
Iceland (아이슬란드)	S	0.12
Bangladesh (방글라데시)	L	0.11
Greece (그리스)	L	0.11
Poland (폴란드)	S	0.11
Norway (노르웨이)	L	0.11
Ireland (아일랜드)	S	0.10
Malta (말타)	S	0.08
Portugal (포르투갈)	S	0.07
Tunisia (튀니지)	S	0.02
Comoros (코모로)	S	0.01

출처: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The Success of Small Countries*, p. 25.

이런 이질성은 병합 한반도 정치공동체 분열의 잠재적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은 차이의 정치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낙관한다. 그럼에도 국가 규모와 이질성이 반비례한다면, 단순한 병합보다는 집적(aggregation)을 추구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집적은, 크게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는 요소들을 결합하며 화합하기 어려운 요소들은 분리하기 쉬운 패턴을 통하여, 한 체계의 요소들을 조직화하는 것을 뜻한다.<sup>81</sup>

검토한 소국 성공 모델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 규모와 동질성이 그 성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도 강하다. 가령 카토(CATO) 연구소의 바스케스(Ian Vasquez)는 국가 변형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의 수준이라고 한다. 경제적 자유와 변형은 서로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갖는다. 규모와 동질성이 아니라 인류의 자유도 지수(Human Freedom Index)가 높은 나라일수록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개방적이다. 한국은 35위이며 통

<sup>81</sup> Axelrod and Bennett, "A Landscape Theory of Aggrega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3, no.2 (1993), p. 211.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polis)를 전체(whole)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비슷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wholes)와 더미(heap)의 차이, 전체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R. G. Mulgan, *Aristotle's Political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1977), pp. 28~35 참고.

일 예멘은 158위로 꼴찌에서 둘째이다. 하지만 인류의 자유도 지수 상위 10개국은 홍콩, 스위스, 뉴질랜드, 아일랜드, 덴마크,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순이다. 그 가운데 여전히 7개국이 소국이다.<sup>82</sup> 인과관계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알레시노-스포르오레 모델에 비판적인 경제학자는, 중립적인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sup>83</sup> 경제적 성과에서 보면 소국이 대국보다 우수한데, 그 적음을 주로 자유무역과 해외 직접투자로 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장률의 높은 변덕을 낳는 대외적 충격에 아주 취약하다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소국의 대외적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현재로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대국을 추구함에 있어, 조심스러운 민주주의자는 규모의 비용을 더욱더 의식한다.<sup>84</sup> 리바이어던(독재자)은 반대인 듯하다.

#### IV. 마무리

병합 한반도가 규모의 편익을 크게 받기 어려울지 모른다. 한국경제는 이미 세계경제에 육중하게 의존하고 있다. 만약 한국과 북한이 병합된다면, 병합 한반도는 세계경제에서 멀어지고 북한 지역 우선의 경제정책을 펼 수 있다. 당연히 북한 지역은 세계경제로의 급속한 통합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농수산물 시장개방, 자동차 시장개방, 쇠고기 시장개방과 광우병을 둘러싸고 어떻게 한국사회가 분열되었는가를 떠올릴 수 있다.

남북한 지역의 이질성은 갈등·재분할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한국사회 내에서는 남남갈등뿐만 아니라 지역감정, 지역 간 적대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병합 한반도는 남남 갈등에 남북·북북 갈등을 첨가시킬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성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히려 통합이 아니라 재분할의 강력한 기반을 다지게 할 수 있다. 법치국가이며 세계 2대 채권국가인 독일은 전체인구의 20% 가량인 동독 지역 주민과의 이질성 극복을 위해 30년 가까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동

<sup>82</sup> Ian Vasquez and Tanja Porčnik, *The Human Freedom Index* (Washington: CATO Institute, 2016).

<sup>83</sup> Joze P. Damijan, Sandra Damijan and Osiris Jorge Parcerro, "Is there a Premium in the size of nations?" VIVES, Discussion Paper no. 40. (November, 2013).

<sup>84</sup> *The Economist*, December 18, 2003.

질성 회복은 더디다. 한국 인구의 50%이며 경제규모는 한국의 1/40인 북한 주민과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개도국인 병합 한반도가 성과를 내지 불확실하다. 남북한 사이의 이질성은 동서독 사이의 이질성보다는 크다.<sup>85</sup> 중요한 건 이질성이 국가의 성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알레시나에 따르면, 규모와 이질성의 상관관계가 항상 완전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소국 가운데 발칸 반도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질성이 아주 크지만, 더 큰 인구를 지닌 한국의 경우에는 동질성이 아주 크다고 한다. 하지만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경제적 격차가 큰 상태에서 한국이 북한을 병합하였을 때, 병합 세력 보다는 분열 세력이 더 강해질 듯하다. 가령 지역 간 소득 이전의 범위를 둘러싸고 그러할 수 있다.<sup>86</sup>

경제통합과 정치통합 붕괴는 함께 갈 수 있다. 한국과 북한의 병합은 이질성으로 인하여 일관적인 무역정책, 공공정책, 대외관계, 세금, 분배구조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게 할 수 있다. 병합 한반도 보다 더 동질적인 소국에서 합의와 응집력을 도출하기 쉬울 듯하다. 현재로서는 한국은 북한과의 병합이 아니라, 한국내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실질적 분권화-지역 정부-를 추진하여, 경제적 성과를 크게 내어야 한다. 한국 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동일한 목소리를 내게 한다는 의미이다. 소국일수록 동질성이 높아지고 성공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갈등의 가능성도 줄어든다.

북한이 빈곤한 이유는 자유무역질서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이 세계 무역 질서에 편입되어 편익을 본다면, 북한은 성공을 거둘 수 있으며, 북한의 호전적 성향은 줄어들 수 있다. 북한이 자유무역질서에 참여하여 세계시장 규모의 편익을 보게끔 하여, 한국과 북한이 모두 검토한 소국의 성공을 거둔다면, 국내적·남북한 간 갈등과 전쟁 가능성은 낮아지고, 평화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듯하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감안하면, 남북한 병합은 반대의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제도(制度)인 정치적 국경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경이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고려해야 한다.<sup>87</sup> 국경은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선 안 된다. 덮어놓고 통일하자라는 식은 종종 우를 범할 수 있다. 통일을 원할지라도, 결혼에서처럼, 때때로 고통스러운 강제 병합보

<sup>85</sup> 페터 코입, “구동독 독재정권하에서의 시스템적 감시와 억압,” 『통일신문』, 2017.09.18.

<sup>86</sup> Alberto Alesina, “The size of countries: Does it matter?,” p. 305.

<sup>87</sup> Sanjeev Goyal and Klass Staal,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8 (2004), pp. 563~593.

다는 평화적인 이혼상태가 더 나올 수 있다.<sup>88</sup> 병합 한반도(대국)가 한국(소국) 혹은 북한(소국)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룰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이런 CS 분석과 알레시나-스포라오레 모델과 그 수식(數式)에 입각한 병합 한반도 전망이, 과장과 지나친 단순화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지만 말이다.<sup>89</sup> 모든 다른 요소를 무시하고 단일 요체인 국가 규모와 성공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한계도 꼬집을 수 있다.

그러나 알레시나-스포라오레 모델에 바탕 해서 생각하면, 병합 한반도에 대한 한국의 관점은, 현실-물질적 번영과 안보를 위한 희망-과 이상-한민족 문화 통일이 라는 고래적 전통-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자를 희생하여 후자 쪽으로 기울는 듯하다.<sup>90</sup> 탈영토화 시대에 한국의 통일정책은 다시 디자인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병합 사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적인 요인들은 사실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애매하고 불확실하다. 병합 한반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 통일을 국가의 성공으로 꼭 단정할 필요는 없다. 통일신중론도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규모와 그 성공이라는 단일 요인에서 보면, 동질적 소국이 더 바람직할 듯하다. 국가 규모와 그 성공을 합리적 근거 가운데 하나로 고려한다면, 작고 동질적인 국가들이라는 틀 안에서 경제통합-정치통합 붕괴-과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데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작은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sup>91</sup>

■ 제출: 10월 27일 ■ 심사: 11월 6일 ■ 채택: 12월 11일

## 참고문헌

### 1. 단행본

김규륜 외. 『한반도 통일의 효과』. 서울: 통일연구원, 2014.

조한범 외.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3.

<sup>88</sup> Alberto Alesina and Enrico Spolaore, “What’s happening to the Number and Size of Nations?,” *E-International Relations* (November 9, 2015).

<sup>89</sup> Enrico Spolaore, “The Economics of Political Borders,” in *Prepared for the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eds. Eugene Kontorovich, Edward Edgar, Publishing, Cheltenham (*Research Handbooks in Law and Economics series*), (March, 2012). p. 3.

<sup>90</sup> Thomas Friedman 저·장경덕 옮김,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서울: 21세기 북스, 2009).

<sup>91</sup> E. F. Schmacher 저·이상호 옮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서울: 문예출판사, 2002)에서 따옴.

-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통일개발과, 2016.
- Friedman, Thomas 저·장경덕 옮김.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서울: 21세기 북스, 2009.
- Schmacher, E. F. 저·이상호 옮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서울: 문예출판사, 2002.
- Aghion, Philippe and Peter W. Howitt. *Endogenous Growth Theory*. Cambridge: MIT Press, 1998.
- Alesina A. and E. Spolaore. *The Size of Nations*.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3.
-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The Success of Small Countries*. Zuerich: CS AG, 2014.
- Garfinkel, Michelle R. and Stergios Skaperdas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Peace and Confli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Gellner, E. *Thought and Chang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96.
- Hjort, Mette and Duncan Petrie. *The Cinema of Small Nation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7.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7*. Washington: IMF, 2017.
- Kohr, Leopold. *The Breakdown of Nations*. Cambridge: Greenbooks, 2011.
- Kraus, Michael & Allison Stanger, eds. & tran. *Irreconcilable Differences? Explaining Czechoslovakia's Dissolution*. Oxford: Rowman & Little Field, 2000.
- Mattes, Wolfgang et al. *Politik erleben*. Paderborn: Verlag Schoeningh, 1995.
- Mulgan, R. G. *Aristotle's Political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1977.
- Ohmae, Kenichi. *The Borderless World: Power and Strategy in the Interlinked Economy*. New York: HarperBusiness, 1990.
-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Harvard: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Robinson, E. ed.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Size of Nation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960.
- Trapp, Robert ed. *Programming for Peace: Computer-Aided Methods for International Conflict*. Dordrecht: Springer, 2006.
- Vasquez, Ian and Tanja Porčnik. *The Human Freedom Index*. Washington: CATO Institute, 2016.
- Wei, Shang Gin. *To divide or to unite: A theory of secessions*. Mimeo: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91.
- Wohlgemuth, Michael. *The Boundaries of the State*. Freiburg: Walter Eucken Institut, 2011.

## 2. 논문

- 권영경. “기존 통일비용 담론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시각.” 『평화학 연구』. 제1권 4호, 2010.

임현진·정영철. “전환의 계곡을 넘어: 통일편익, 통일비용 그리고 통일혜택.” 『역사비평』. 97호, 2011.

Alesina, A. “The Size of Countries: Does it matter?.”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vol.1, no. 2~3. 2003.

Alesina, A. and Drazen. “Why stabilization delay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1. 1991.

Alesina, A. and E. Spolaore. “Conflict, Defense Spending, and the Number of Nation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50, no. 1. 2006.

Alesina, A. and E. Spolaore. “On the number and size of natio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2. 1997.

\_\_\_\_\_. “Together or separately? Issues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political and fiscal unions.” *Europe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1995.

\_\_\_\_\_. “War, Peace and the Size of Countr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9, no. 7. 2005.

Alesina, A., Devleeschauer, Esterly, Kurlat and Wacziarg. “Fractionalization.” Harvar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no. 1959. 2002.

Alesina, A., E. Spolaore and R. Wacziarg. “Economic Integration and Political Disintegr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0, no. 5. 2000.

Alesina, Alberto & Enrico Spolaore, Roman Wacziarg. “Trade, Growth and the Size of Countries.” In *Handbook of Economics, Growth, volume 1B*. eds. Philippe Aghion and Steven N. Durlauf. Amsterdam: Elsevier 2005.

Alesina, Alberto and Enrico Spolaore. “What’s happening to the Number and Size of Nations?.” *E-International Relations*. November 9, 2015.

Alesina, Alberto, Roberto Perotti, Roberto & Enrico Spolaore. “The Political Economy of Fiscal Discipline, Together or Separately? Issues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political and fiscal union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9. 1995.

Axelrod and Bennett. “A Landscape Theory of Aggrega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3, no. 2. 1993.

Boadway, Robin and Masayoshi Hayashi. “Country Size and the voluntary provision of international public good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5. 1999.

Bolton, R. and G. Roland. “The breakup of nations: A political economy analysi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40. 1997

Casella, A. and J. Feinstein. “Public goods in trade: on the formation of markets and jurisdiction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43, no. 2. 2002.

Christopher, Laincz, A. and Pietro F. Peretto. “Scale Effects in endogenous

- growth theory: an error of aggregation not specification.” *J Econo Growth*. vol. 11. 2006.
- Damijan, Joze P., Sandra Damijan and Osiris Jorge Parcero. “Is there a Premium in the size of nations?.” VIVES Discussion Paper no. 40. November, 2013.
- Friedman, D. “A Theory of the Size and Shape of N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5, no.1. 1997.
- Goyal, Sanjeev and Klaas Staal.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8. 2004.
- Gwartney, James. “Presidential Address: Institutions, Economic Freedom, and Cross-Country Differences in Performance.”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75. 2008.
- Hebling, Thomas. “What are externalities?.” *Finance & Development*. December, 2010.
- Howard, Marjorie. “Is there a perfect size for a country? Economist says yes.” *Tufts Journal*. February, 2005.
- Jharakan, Joe and Jacques-François Thisse. “The Importance of being small, or When countries are area and not point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 32. 2002.
- Jones, Charles J. “Growth: With or Without Scale Effec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9 no. 2. May, 1999.
- Koenig, Joerg and Renate Ohr. “Small but Beautiful? Economic Impact of the Size of Nations in the European Union.” CEGE Discussion Papers. no. 128. 2011.
- Kolossov, Vladimir and John O’Lighlin. “New Borders for a new world orders: Territorialities at the fin-de-siecle.” *Geojournal*. vol. 44. 1998.
- Kuznets, S. “Economic growth of small nations.” In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size of nations*. ed. Robinson EAG. New York: Macmillan, 1960.
- Lloyd, P. J. and R. M. Sundrum. “Characteristics of small economies.” In *Problems and Policies in Small Countries*. ed. B. Jalan. Beckenham: Croom Helm, 1982.
- Maass, Matthias. “The elusive definition of the small state.” *International Politics*. vol. 46, no. 1. 2008.
- Mackinder, H.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23, no. 4. 1904.
- Milner, C. R. and Thomas Weyman-Jones. “Relative national efficiency and country size: evidence for developing countries.”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7, no. 1. 2003.
- Offe, Claus. “Homogeneity and Constitutional Democracy: Coping with Identity Conflicts through Group Rights.”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vol. 6, no. 2. 1998.

- Pnić, M. "The end of the nation state?."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vol. 8. 1997.
- Rasmussen, Svend. "Economies of Scale and Size." In *Production Economics*. New York: Springer, 2013.
- Read, Robert. "Growth, Economic Development and Structural Transition in Small Vulnerable States." WIDER Discussion Paper no. 2001/59. United Nation University, August, 2001.
- Spolaore, E. "Economic Integration, International Conflict and Political Unions." *Rivista di Politica Economica*. Settembre-Ottobre, 2004.
- Spolaore, Enrico. "The Economics of Political Borders." In *Prepared for the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eds. Eugene Kontorovich, Edward Edgar. Research Handbooks in Law and Economics series. March, 2012.
- Suesse, Marvin. "Accounting for the Size of Nations: Empirical Determinants of Secessions and the Soviet Breakup." EHES Working Papers in Economic History. no. 67. 2014.
- Sutton, Paul. "The concept of small stat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e Commonwealth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00, no. 413. 2011.
- Yoo, Chan Yul.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Korea as a Small State." *MD disser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1990.
- Zaheer, Srilata, Margaret Schomaker and Mehemet E. Genç. "Separate Yet Equal: Organization Identity and Culture in International Merger of Equals." no. 241. University of Minnesota, Strategic Management Research Center, 2003.

### 3. 기타

『통일신문』.

*Deutsche Welle* <<http://p.dw.com>>.

*The Economist*.

US Department of State <<https://www.state.gov>>.

## The Size of a State and its Success on the Korean Peninsula

*Rhee, Byounghee*

This article analyses & critiques the Korean unification plan from the viewpoint of the political/economic benefits and costs based upon the Alesina-Sporaore Model constructively.

According to this model, the idea that benefits are bigger than the costs in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seems to be perhaps unscientific. The truth is that bigger is not always better. The role of political boundary on the Korean Peninsula is changing in our globalized world. This boundary should not go beyond the limits which meet the economic and social needs of its citizens. the Alesina-Sporaore Model tells us that it is not necessarily worth while to unify two Koreas friendly or unfriendly in 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and political disintegration tend to go hand in hand.' Two or more than two smaller and more homogeneous states may be better on the Korean Peninsula. Small may be more beautiful. Prudence is also needed in the process and policy of the Korean Unification.

The paper contributes to a clearer and more scientific avenue of inquiry to understand the integration of two Koreas in terms of the optimum size of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and its success.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Key Words:** The Size of a Nation, the Korean Unification, The Cost and Benefits of the Size, The Success of Small Nations, Alesina-Splaore Model.